

[울산출입국폭행사건에 대한 경기이주공대위성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끝가는 줄 모르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에서 있었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일을 벌였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단속 중 부상당한 이주노동자를 면회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이 센터 활동가들에게 울산출입국소속 직원 최00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여성활동가 성00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완력을 사용하여 팔과 손목을 비틀었으며, 함께 있던 오00 활동가의 왼쪽 뺨을 주먹 등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그의 폭력은 병원경비원들과 다른 출입국직원들이 제지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런 상식밖의 일이 벌어진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는 문재 인정부하에서 공무원이 백주대낮에 인권활동가를 린치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그러나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소위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민)를 단속한다는 명분 하에 야간단속, 함정단속, 토끼몰이식 단속 등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높은데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집단폭행으로 피멍이 들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율 00%이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처럼 유아무야 묻혀져 왔다.

이번 울산출입국직원에 의한 폭행사건은 이주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얼마나 쉽게 내국인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내국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길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하였다.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폭력단속이야말로 전형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 역시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폭행당한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지원이 있어야 한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은 물론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관련책임자들의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행정의 특수성'을 들며 자의적이고 반인권적 법집행을 일삼아 온 출입국당국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1일

경기이주공대위